

행정통합…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경제활력 기대

광남일보·KBC 공동, 광주·전남 통합 찬반 여론조사

시·도민 58.4% '찬성'…'반대' 27%
40대 이상 찬성·30대 이하 반대 높아
충분한 논의·사회적 합의 부족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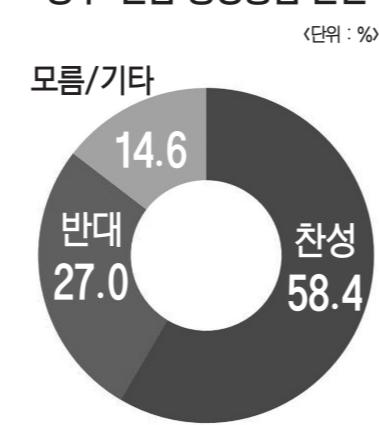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 58.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으로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을 보인 반면,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 5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0%였다.

모름이나 기타는 14.6%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반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은 찬성이 59.1%로, 광주(57.6%)보다 1.5%p 더 높았다.

반대는 광주(30.0%)가 전남(24.6%)보다 5.4%p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65.5%)이 여성(51.4%) 보다 찬성이 높았으며, 반대는 여성(29.8%)이 남성(24.1%) 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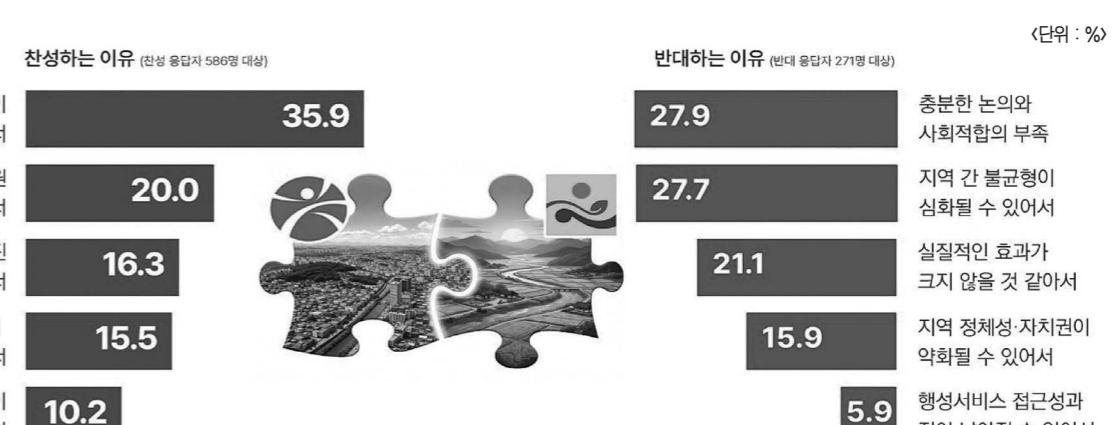
세대별로는 '70대+'에서 찬성이 72.2%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71.0%, 60대 68.2%, 40대 53.8% 순이었으며, 반대는 30대와 18/20대에서 각각 43.9%, 42.1%

를 보여, 청년층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

아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찬성이 각각 65.6%, 63.0%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대(56.6%)가 더 커졌다.
권역별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광주에서는 남구가 60.6%로 가장 높았고, 동구 59.1%, 서구 57.6%, 북구 57.2%, 광산구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반대 이유



55.8%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광주근교권의 찬성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부권 58.5%, 서남권 53% 순이었다.
시도민은 행정통합 찬성 이유로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경제 도움(35.9%)을 최우선으로 답했다.

이어 재정·예산 확보나 국비 지원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

(27.9%). 특정 지역으로 기능·예산 솔림 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27.7%).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 (21.1%), 지역 정체성·자치권이 악화(15.9%),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저하(5.9%) 등을 우려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는 4일 화순전남대병원 김재봉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체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한번에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구축…21개 의료기관 연결
환자 이송·전원·최종치료 연계…'응급실 빽빽이' 제로화

광주시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혜택을 이용하는 '응급실 빽빽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로 연결되며 환자 이송과 치료 결정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평가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 가능 병원, 가능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며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까지

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 가능 병원, 가능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로 연결되며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까지

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

병원으로 자체 없이 연동된다.

시는 특히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플랫폼을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Pre-KTAS 1, 2)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6개

의료기관 당직의사가 공동 대응한다.

다수 전문의가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정 병

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해 '응급실 빽

빽이'를 사실상 제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응급

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역 문제를 지적하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정부 기조

와도 맞닿아 있다.

시는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해 10월 21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를 열고, 지난해 12월까지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마쳤다.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이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연계·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정

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간담회'에서도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

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

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

료플랫폼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혜택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광

주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도 경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

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

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 역시

중대 위법행위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

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장흥·무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인허가 등 혜택 기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소 중 장흥군과 무안군 2개소가 선정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장흥군과 무안군 육성지구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8년까지 개소당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 설립을 예상했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 155명을 양성·수료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교육·실습·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부담

이 큰 스마트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청

년농업인이 저비용으로 첨단 재배기술

을 경험하고 영농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데이

터 기반 재배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교육 기능도 함께 수행하

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